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		

2017년 12월 21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 21.(목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12. 20.(수)	담당부서	철강화학과, 통상협력총괄과, 통상법무과
담당과장	윤성혁 과장(044-203-4280) 양병내 과장(044-203-5680) 신정훈 과장(044-203-5770)	담 당 자	이우진 사무관(044-203-4286) 천서현 사무관(044-203-5685) 강석하 사무관(044-203-5773)

「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」 개최

- 수입규제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, 업계 및 학계가 머리 맞대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업계와 통상 분야 전문가가 모인 **「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」**을 개최했다.

< 철강 수입규제 민·관 합동 워크숍 개요 >

○ **일시 / 장소** : '17. 12. 21(목) 10:30 ~ 12:00 / 무역협회 대회의실 (51F)

○ **참석자 : (정부)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(주재)**, 철강화학과장, 통상법무과장, 통상협력총괄과,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

- **(업계)** 포스코, 현대제철, 동국제강, 세아제강, 휴스틸, 넥스틸, 한국철강협회
- **(학계·전문가)** 고려대학교, 명지대학교, POSRI, 법무법인 김&장, 법무법인 화우, 법무법인 세종, 회계법인 The ITC, 한국무역협회

○ 이번 워크숍에서는 **철강 글로벌 공급과잉**, 미국 등 **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**, **불리한 가용정보(AFA)·특정 시장상황(PMS)** 등 새로운 반덤핑·상계관세 조사 기법, **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(무역확장법 232조)** 등 **최근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**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.

< 주요 논의 내용 >

□ 철강 분야의 국제 **공급과잉은 약 7.4억 톤**이며, 당분간 철강 수요의 정체가 예상되어 **구조적인 공급과잉이 장기화**될 가능성이 높다. (철강협회)

○ 이로 인해 각국은 **보호무역주의 장벽**을 높이고 있으며, 전세계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'16년 기준 **345건**에 달한다.

□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다수의 수입규제를 발동 중인 **미국**의 경우, 최근 **통상법 개정, 행정명령, 무역구제 직권조사** 등을 활용해 파급력이 큰 통상정책을 발표했다. (POSRI)

○ 앞으로도 미국 행정부는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**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**할 것으로 전망했다.

○ 미국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**불리한 가용정보(AFA), 특별한 시장상황(PMS)** 등의 조사 기법을 활용한 **높은 수준의 반덤핑·상계관세 판정**을 내리고 있는 바, 전문가들은 **업계** 차원에서는 **조사 과정상의 충분한 협조**를 통해 **불리한 가용정보(AFA) 등 적용 소지를 최소화**하고, **정부**는 세계무역기구(**WTO**) **제소 등을 통한 지원**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(회계법인 The ITC)

□ 한편, 최근 미국이 실시 중인 **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**를 통한 새로운 형식의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다.

○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 상무부는 **내년 초**까지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, 조사 결과에 따라 **긴급관세, 수량제한(쿼터 또는 관세할당), 수출자율규제, 반덤핑·상계관세 직권조사** 등이 실시될 수 있다.

○ 참석자들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, 최근 미국의 통상 정책 동향 및 철강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한 **부정적인 결과 가능성에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비**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
< 그간의 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 >

□ 박기영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철강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업계가 **「철강 수입규제 TF」**를 통해 **공동의 대응 노력을 지속**해왔으며, **앞으로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**이라는 점을 강조했다.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□ 박 국장은 그간 정부는 **공청회 참석, 의견서 제출, 양자 및 다자회의**(세계무역기구(WTO) 보조금 위원회, 철강 글로벌포럼) 등 가능한 모든 계기에 **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**해왔으며,

○ 특히, 미국의 232조 조사 관련, ❶한국이 미국의 **안보 동맹국**이며, **대규모 무기 수입국**이고, ❷미국의 대(對)**한 철강 수입이 감소***중이며, ❸우리 철강사·관계사들이 대(對)**미 투자 및 현지 고용**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강조했음을 설명했다.

* 대(對) 미 철강 수출(물량 기준, 천톤) : ('14) 5,711 → ('15) 3,955 → ('16) 3,740→ ('17.1~10) 3,007 [전년동기비 △5.2%]

□ 한국철강협회는 우리 업계도 외국의 **수입규제 조사에 충실히 협조**하면서 **자체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**하고, 과도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**국내 구제 절차***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소개했다.

* 미국 국제무역법원(CIT) 제소 : 한국산 도금칼라, 냉연강판, [illegible]연강판, [illegible] 유정용 강관 반덤핑·상계관세 판정에 대해 우리 업계(포스코, 현대[illegible] 넥[illegible] 등)가 제소

○ 특히, 업계, 정부 및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으로 최근 [illegible] **국제무역법원(CIT)**에서 **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**(10.27)이 내려지는 성과도 있었다는 점을 말했다.

□ 워크숍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**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**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, 일부 수입규제는 상대국과의 통상 관계 뿐 아니라 **전반적인 외교·안보 관계에도 영향**을 미칠 수 있으므로, **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**하다는 점에 동의했다.

○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 하에 **통상 및 외교 채널을 충분히 활용**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,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(**WTO**) **제소 등도 적극 검토**하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이우진 사무관(☎ 044-203-42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